

코로나19 극복... 오늘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에 '한 줄기 빛?'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은 중소기업이 1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과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지원규모는 4조1000억원 수준으로 정부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예비비 3조5575억원과 새희망자금 잔액 5000억원을 더한 액수다.

▲지원대상 및 금액
중기부는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중대본·지자체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 원, 2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는 영업피해 지원금(100만원)에 더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체에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 원, 100만 원을

중기부,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위해 각각 300·200만원 연매출 4억원 이하 전년 대비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 100만원

추가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이다. 또, 지자체가 추가로 시행한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된 경우에도 지원한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시행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시행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된 숙박시설(부대업체 포함)과 영업제한된 숙박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단,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이다.

지원받지 못한다.

▲신청·지급 시기
버팀목자금은 11일부터 지급된다. 행정정보 파악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매출감소로 기존의 새희망자금 지급받은 소상공인 등이 지원대상이다. 다만 매출감소로 지원받은 일반업종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는 2020년 매출액의 증가가 확인되면 지원금은 환수된다. 11일 문자를 받고 즉시 신청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금은 빠르면 당일인 11일 오후 또는 다음날인 12일 오전에는 지급된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이후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19년에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3월중에 공고할 예정이다. 종전 부가세 신고기

한인 1월 25일까지 매출 신고한 경우 빠르면 3월 중순에 지원금 수령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1월 25일 이후에 매출을 신고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버팀목자금 지급시기는 늦어질 수 있다.

▲안내 관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전용 콜센터(☎1522-3500)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상세한 지원기준, 문자안내 일정, 신청절차 등 보다 자세한 버팀목 자금 추진계획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go.kr)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오늘 중소벤처기업부의 브리핑을 통해 일일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지원'

농협은행 전북본부, 2021년 경영전략 화상회의
녹색금융 생태계 조성 위한 E.S.G 경영 강조

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지난 8일 영업본부 상황실에서 '2021년 경영전략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장기요 본부장을 비롯한 도내 52개 전 영업점 사무소장이 참석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북본부는 2021년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약의 해'로 삼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농업 금융활성화를 통한 농업인 실익증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에 총력



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지난 8일 영업본부 상황실에서 '2021년 경영전략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부는 현재 도입·운영 중인 친환경 디지털창구 시스템인 창구전자문서시스템(PPR)과 금융 상담 톨 위드토크를 활성화하고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종이 없는 회의 추진으로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한 장 본부장은 녹색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ESG 경영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스마트팜 등 녹색금융 관련 지원을 확대할 것과 전북형 그린뉴딜 정책을 선도하는 지역 대표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주문했다.

장기요 본부장은 "조속한 전북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임직원이 힘을 한데 모아야 할 시기"라며 "NH농협은행은 지역사회와 상생·협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신협두손모아봉사단과 전북도체육회는 지난 8일 '전북관내 비인기종목 우수선수 지원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비인기종목 우수 선수 지원 '맞손'

전북신협-도 체육회, 협약 체결

전북신협두손모아봉사단(단장 오종근)과 전북도체육회(회장 정장선)는 지난 8일 '전북관내 비인기종목 우수선수 지원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전북신협두손모아봉사단 오종근 단장(은누리신협 전주), 신협중앙회전북지부 김영하 본부장, 전북신협지역협의회 유원영 회장(삼례신협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진행됐다.

우수선수 지원 업무협약은 전라북도 도내 중(고)등학교 운동부 비인기종목 지원을 통해 선수들의 훈련환경 개선 및 우수선수 발굴, 육성하기 위해 마

련됐으며, 이를 통해 도내 사회단체들의 운동부 지원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신협두손모아봉사단 오종근 단장은 "인기 종목에만 국한된 후원이 아닌 비인기 종목에 후원을 하여 비인기 종목 선수들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우수선수로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협중앙회전북지부 김영하 본부장은 "도내 우수선수들이 비인기종목이라는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것에 큰 아쉬움을 느꼈으며 이번 후원을 통해 도민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등은 제외

산업재해나 대형사고 발생 시 안전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적 266석, 찬성 164명, 반대 44명, 기권 58명으로 중대재해법을 의결했다.

중대재해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폐기됐다. 하지만 이번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이 당론으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이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제정에 불교를 뒀다.

하지만 정기국회 내 거대 양당의 미온적 태도에 법안 제정에 진척이 없자 정의당과 산업재해 피해자 유가족들이 단식농성에 나서면서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탔다.

이날 통과된 제정안은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안으로 정부가 제출한 정부안을 대폭 수용했다. 큰 특징은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눴다는 점이다.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1명 이상 사망한 사고를 의미한다. 중대시민재해는 제조물이나 공공이용시설 등의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슴기 살균제 사고 등이 해당된다.

여야 합의안은 당초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낸 안이나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낸 안보다 처벌 대상은 줄고, 처벌 수위는 대폭 낮아졌다.

우선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제외했다.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설명을 위해 단상으로 하고 있다.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의 소상공인과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 바닥 면적 기준 1000㎡ 미만의 업소는 제외됐다. 중소기업법 등 정부 부처의 반발을 받아들인 결과다.

사망사고가 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강 의원이 낸 3년 이상 징역이나 박 의원의 2년 이상 징역보다 하한을 낮췄고, 벌금의 하한선도 없었다. 법안의 경우 5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역시 정부 의견을 받아들여 '최대 5배'로 정해졌다. 이 역시 강은미 안(최저 3배~최대 10배), 박주민 안(최저 5배)보다 후퇴한 내용이다.

논란이 됐던 처벌 대상 역시 '대표 이사 또는 안전담당 이사'로 명기해 대표이사는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대상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했다.

과잉 입법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과 공무원 처벌 특례규정은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유예기간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포일로부터 3년 뒤 시행, 다른 사업장은 모두 공포 후 1년 뒤 시행하기로 했다. 규모별 유예기간 차등이 아예 없었던 강은미 의원안보다는 후퇴했지만 50인 미만, 50~100인 등 사업장 규모별 차등을 두었던 정부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여당 의원들도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대상이 지나치게 축소돼 입법 효과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 정의당 역시 법안 취지를 훼손해 '중대기업처벌법'이 아닌 '기업살인방조법'이라며 거세게 비판했지만 소위 의결안은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의결됐다.

대신 부처에서 반기별로 대책과 지원현황 등을 국회에 보고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가 줄지 않을 경우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도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뉴시스

농진청, 연구사 24명
공개경쟁 채용 통해 선발

내달 15~19일 원서 접수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2021년도 연구직 공무원 24명을 공개경쟁 채용 시험을 통해 선발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채용예정 직급은 농업연구사이며, 작물, 농업환경, 작물보호, 농공, 원예, 축산 등 6개 직류별로 모집한다. 공개경쟁 채용 시험에는 학력과 경력 제한 없이 만 20세 이상(200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시험은 1차(공통 3과목)와 2차(분야별 전공 4과목)를 객관식 필기시험(사지선다형)으로 같은 날 함께 치른다. 1~2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3차 심층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응시원서는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고, 2월 15일부터 2월 19일까지 농촌진흥청 누리집을 통해 접수한다. 필기시험은 4월 24일에 치러지고, 5월 말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농촌진흥청 김진진 운영지원과장은 "농업·농촌의 미래와 농업기술의 혁신을 이끌어 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063-238-0234~5)로 문의하거나 농촌진흥청 누리집(http://www.rda.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누리집(jojob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한국판 뉴딜' 전문인력 키운다

LX공간정보아카데미
교육과정 11월까지 운영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LX)가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최신 교육과정을 통해 공간정보분야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공간정보아카데미(원장 직무대행 최광제)는 오는 1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20개 재직자과정과 취업준비생 맞춤형 채용예정자과정을 운영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아카데미의 모든 교육과정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공간정보관련 과정과 빅데이터관련 과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이슈인 재직자와 구직자들의 관심이 높다.

또한 재직자 교육과정은 공간정보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기본강좌부터 스마트시티 비즈니스 모델 개발, 자율주행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실무과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강좌로 마련됐다.

전년도 98%의 취업률을 자랑하는 채용예정자 과정은 오는 7월부터 5개월간 진행되며, 서류접수와 면접심사를 통해 3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해 교육생들은 공간정보기반의 프로그래밍 교육을 통해 드론의 안전 운행경로 계획, 전원주택 건축을 위한 편리한 토지거래 담보, 옥상 공유 등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관련 분야의 취업에 성공했다.

교육신청은 공간정보아카데미 홈페이지(https://lxsedu.or.kr)를 통해 1월 1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순차적으로 개강하는 과정은 강의 시작 전 2달 전에 신청 가능하다. 모든 교육과정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훈련센터에서 집단 훈련으로 진행된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일부 과정은 실시간 온라인 원격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의 교육지원사업인 이번 교육과정의 비용은 중소기업 재직자의 경우 전액 무료이며, 대규모 기업 재직자에 한해 일부를 납부하게 된다.

최광제 원장 직무대행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 육성이 시급하다"면서 "협약기업 재직자는 물론 공간정보산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LX공간정보아카데미의 디지털 혁신 교육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강소기업, 세계 일류 꿈꾸다

전북중기청, 내달 8일까지 글로벌강소기업 참여기업 모집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이 세계시장 선도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하고자 '2021년도 글로벌강소기업' 참여기업을 2월 8일까지 모집한다.

글로벌강소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 100~1000억원, 직·간접수출 500만불 이상 성장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해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전북에서는 2017년 이후 23개사가 지정되었으며 금년에는 6개사를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중앙-지방-민간 간 협력모델을 통해 향후 4년간 중기부, 지자체, 민간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해외마케팅, 지자

체 자율프로그램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글로벌강소기업 신청·접수는 2월 8일까지 수출지원센터 누리집(www.exportcenter.go.kr)을 통해 할 수 있으며 평가는 서류심사, 현장평가, 발표평가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윤종욱 전북중기청장은 "코로나19, 미중 무역갈등 등 교역조건 악화 상황에도 눈에 띄는 수출성장세를 갖춘 지역기업이 많았다"면서 "전북중기청은 이러한 기업을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지정 후 세계 일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많은 기업들의 신청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김윤상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마스크 착용 '필수'·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